수장 잃은 교육부… 수능 수습부터 대입 개편까지 과제 산적

최교진 사퇴에 차관 직무대행 체제
부정행위 조사·입시 신뢰 회복 시급
고교학점제 안착·교권 보호도 숙제
현안 해결할 후임 장관 인선에 촉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부실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교육부는 당장 수능 부정행위 사후 조사는 물론 입시 행정 안정화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안착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재는 최은옥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가장 먼저 닥친 과제는 수능 부정행위 사태의 수습과 관리 체계 재정비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111건으로, 실제 기기를 이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적 통지 전까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시험 직전까지 대응 방침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행정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인정하고 354건의 접수를 완료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버 이중화와 부하 테스트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특별조사도 연장된 바 있다.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 점검·관리 기준과 수험생 보호 절차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안착도 숙제다. 내년부터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은 첫 세대가 고교 3학년에 진입하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별 과목 개설 여건에 따른 선택권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증원을 후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교권 보호와 교육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전 장관 재임 당시의 교권 보호대책이 현장 체감도가 낮았다며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교육행정 경험자와 정치인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입 일정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사정에 밝은 인물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사청문회 통과를 고려하면 여당 정치인 카드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박백범 가톨릭꽃동네대 총장이 언급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장관 인선 때도 후보군에 올랐다. 최은옥 차관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정책 연속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수능 대응 과정에 참여했던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호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과 고민정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 등 국회 교육위원회 경험자가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홍창남 부산대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온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장관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소신 있게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김종승 화학과 교수


노준홍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춘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클라우스 로베르트 뮐러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고려대 교수 4명, '세계 영향력 연구자' 선정

클래리베이트, 올해 HCR 명단 발표
김종승 교수, 올해로 12회째 이름 올려

고려대학교 교원 4명이 '2026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대는 김종승 화학과 교수와 노준홍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안춘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클라우스 로베르트 뮐러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올해 HCR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HCR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을 토대로 연구자의 학술적 영향력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 교수는 올해로 12회째 화학 분야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다. 노 교수는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9년 연속, 안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7년 연속 선정됐던 뮐러 교수는 올해 화학 분야 연구자로 포함됐다.

김 교수는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표적 항암제와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노 교수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안 교수는 지능제어와 물리적 인공지능을 드론·차량·로봇 등 자율시스템에 적용하는 분야를 연구 중이다.

뮐러 교수는 머신러닝 이론을 비롯해 설명 가능한 AI와 의료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서울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 사고력 중심 평가 전환
2029년까지 내신 비중 50% 이상 목표
채점 공정성·교사 업무부담 해소 과제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중·고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내놨다. 인공지능(AI)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정답 중심 평가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고 과정과 표현력을 살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넘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35%, 2028년 40%, 2029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험 방식만으로 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 만큼, 학교 수업에서부터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다. /경희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에 따라 교원 연수와 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운영하는 실천학교도 늘렸다. 실천학교는 지난해 66개교에서 올해 135개교로 확대됐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도구인 '채움AI'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천학교에서 축적한 약 3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AI 채점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전했다. 인간 채점자와 AI의 채점 일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QWK도 0.8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마다 답안의 표현과 논리 전개가 달라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같은 답안을 두고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할 절차도 필요하다.

AI 채점 시스템이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I 채점 경험이 있는 중등교사 734명 중 64.1%는 'AI가 채점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느라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김수정 기자

수능 시험지 보관기간 5년으로 연장 추진

교육부, 시험지 보관 현황 전수조사

지난해 수능을 치른 시험장 17.8%가 이미 시험지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사후 조사를 위해 시험지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험장 1310교 중 1077교(82.2%)가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3교(17.8%)는 시험지를 폐기했다. 조사는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44개 시험장 모두 시험지를 폐기해 보관율이 0%였다. 인천(41.3%)과 제주(50.0%)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경남과 세종은 모든 시험장이 시험지를 보관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를 폐기한 시험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폐기량과 폐기일자,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관된 시험지는 신고센터 제보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확인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 대폭 강화

서울교육청, 열화상탐지기 추가 투입
복장 점검 강화·무선통신 신호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감독을 강화한다. 시험장에 전파·금속탐지기뿐 아니라 열화상복합탐지기도 투입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실시하는 202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응시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통신·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해당 기기는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방 등에 보관한 사실만 확인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가방과 소지품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복장 점검도 강화한다. 응시자에게 무늬나 장식이 없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시험 시작 전 일회용 앞치마를 배부해 착용하도록 한다. 앞치마 밖으로 드러나는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인다. 매 교시 시작 전에는 소매를 걷어 확인받아야 하며, 안경 착용자는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인 수정테이프·지우개 사용도 금지한다. 지우개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필요시 감독관이 제공한다.

시험장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보안요원이 복도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점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점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외에도 열화상복합탐지기를 시험장별로 추가 투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